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배포시	배포	'21.2.24.(수)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(02-2100-2601)	담 당 자	김민석 사무관(02-2100-2518) 이용준 사무관(02-2100-2516)	
	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김 충 우(02-3145-5550)		한 재 혁 부국장(02-3145-5582)	
	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(02-3774-9002)		이승범 부서장 (02-3774-9020) 이국철 부서장 (02-3774-9140)	

제 목 :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  
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※ '21년 제 2차 「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」 개최

## 1 회의 개요

- 2.24일(수) 오후,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는 '21년 제2차 「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」(이하 감시단)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\* (금융위) 자본시장조사단, (금감원) 조사기획국, (거래소)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

-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(시세조종, 미공개정보이용, 부정거래 등)를 심리(거래소)·조사(금융위·금감원)하는 관계기관이 모여,
-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(트렌드)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·공유하는 협의체입니다.

\* 지난 2월 「불공정거래 조사·심리기관 협의회」(조심협)의 실무협의회로 신설

## 2 주요 논의 내용 : 다수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

□ 감시단은 최근에 다수\*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

\*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이기도 함

□ 특히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·친척·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.

○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·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\*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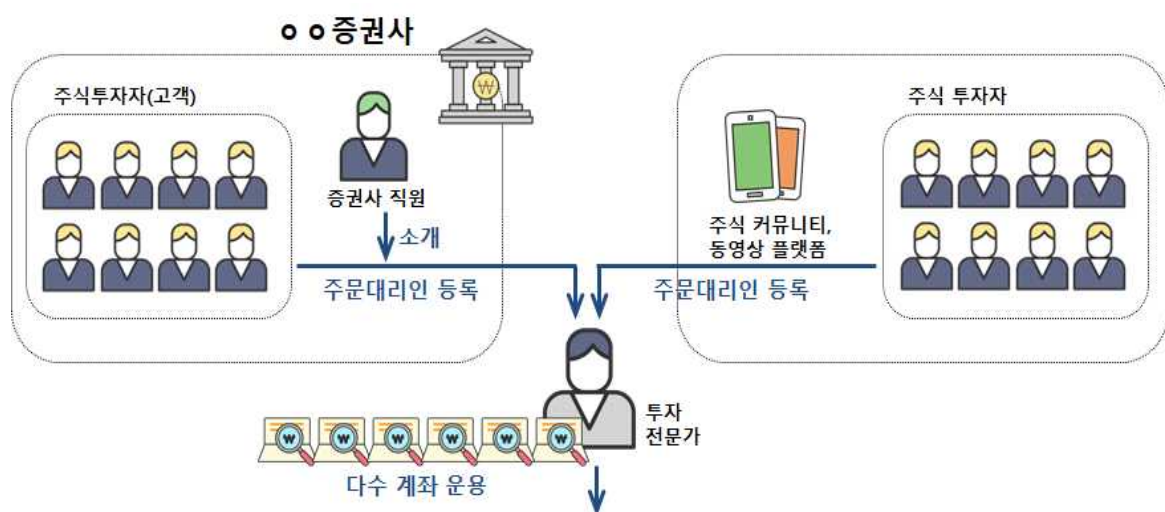
\* 주문대리인 등록, 타인 HTS 약정 등

□ 이는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(FOMO\*)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어났고

\* Fear Of Missing Out 신드롬 :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

○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

### ※ [도식도] 다수의 타인계좌를 확보해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위험성



불공정거래 세력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계좌를 확보하여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할 위험성

### 3 투자자 유의사항

-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,  
계좌주 역시 직·간접적 피해\*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\* 조사의 대상이되거나,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
- ❶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 
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,

⇒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[참고] 방조범 관련 판례 (서울고등법원 2008노1506, 대법원 2009도675)

피고인甲은 피고인乙, 丙의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무실  
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  
정되고 ... (중략) ... 방조범으로 의율된다.

- ❷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\* 빌려주는 경우라도  
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 
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

\* 예: 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, 투자결과도 책임지는 경우

⇒ 「금융실명법」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[참고] 「금융실명법」 제 3조 제3항

누구든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  
른 불법재산의 은닉, ... (중략) ...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 
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→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❸ 또한, 주문 대리인 등록,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 
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 
대가를 받거나,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

⇒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상 접근매체(인증서 등) 관련 규제 위반으로  
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\* 관련 조문은 다음페이지 상단

※ [참고]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 6조 제3항

누구든지 **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** (단서 생략)

(2호) **대가를 수수(授受)·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**

(3호) **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**

→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투자자들은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**행동원칙**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❶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\*되는 경우, 주식계좌를 맡기시면 안됩니다.

\* (예) “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.”,

“○○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.”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

❷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,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\*를 하고 있습니다.

\* 4단계로 진행 : 유선경고 → 서면경고 → 수탁거부예고 → 수탁거부

-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,

투자 대리인이 “별 일 아니다.”라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,



-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매매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❸ 또한 계좌명의만 빌려준다거나 (차명계좌 제공), 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계좌를 맡기셔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□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“증권사 직원” 역시

○ 유사하게 조사·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불공정거래 세력이 감시·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써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,
  - 금융당국·거래소는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·심리를 강화하고,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.
- 또한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,
  -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,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<b>prfsc@korea.kr</b>	 <small>합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